

## 저널리즘과 언어 문제 보도

# ‘언어 규범’ 지키되 ‘언어 현실’도 반영을

이경우 / 서울신문 어문팀장

이 글의 큰 제목에 ‘언어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달고 싶었으나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는 언어의 본질에 있다. 언어는 아무리 많은 존재 이유를 대도 결국은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고 보면 ‘언어저널리즘’은 아직 생소하다.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싶어 꺼려졌다. 자칫 ‘저널리즘의 언어’를 말하려는 것 아닌가 오해할까도 싶었다.

### 언어저널리즘에 대해

저널리즘이 언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자주 짚었다. 정확하게는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라고 할 수 있겠다. 저널리즘의 언어도 공적인 언어라서 독자와 시청자들의 감시와 비판을 받는다. 전문기관으로부터 더 깊이 있는 도움을 받고, 내부에 언어를 다듬고 거르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저널리즘은 우리 사회의 언어 문제와 관련해 오랫동안 많은 지면과 방송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했다. 이런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갈수록 더욱 왕성해지고 있다. 이전보다 기사 수도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국립국어원이 집계한 지난 8월 한 달간 국어 관련 기사 숫자만 봐도 120여 개다. 일주일에 평균 30개의 기사가 나오는 셈이다. 방송이 포함되지 않았으니 방송기사와 빠뜨린 기사까지 합치면 40개는 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언어저널리즘’이란 표현을 써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다. ‘언어저널리즘’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언어와 관련된 정보와 소식을 언론 매체가 보도하는 활동’ 정도 된다. 언어 전문 매체들도 있으니 ‘언어와 관련된 정보와 소식을 알리는 전문 매체’라는 뜻도 되겠다.

이 용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커진다. 용어가 있다는 것은 현상이 뚜렷하게 생겼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것을 개념화했다는 것이다. 하나의 틀이 생겼고, 그 틀에서 대상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된 것이다. 언어와 관련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하는지, 전하는 과정에서 반성할 점은 없는지를 살피게 한다. 저널리즘의 확장이다. 사회적으로는 더 나은 ‘소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언어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와 비평과 비판의 목소리도 신문방송학계에서 나오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언어 문제는 거의 언어 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 저널리즘 언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저널리즘 언어 문제는 거의 국어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봤다. 이것은 어문 규범의 지나친 중시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때로 소통의 장애가 되기도 했다. 언어 현실보다 규범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적 시각에서 언어를 봐야 했다.

저널리즘의 이런 시각은 저널리즘이 언어 관련 소식을 전하는 보도에서도 그대로 같이 나타났다.

저널리즘은 언어 내적 문제를 말하는 데 적극 동참해왔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전달하는 데 저널리즘을 활용했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소홀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았다. 저널리즘 영역이 아니라 언어 영역으로 따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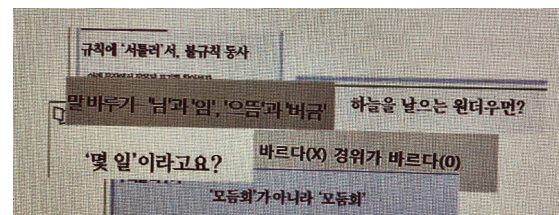
언어 문제는 언어 내적인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바꾸고, 모두의 의식을 바꾸는 것과 연결된다. 한마디로 언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뀔 여지가 꽤 있다. 이런 시각에서 언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모습과 구실을 살피는 게 언어학자들의 몫이라면, 언어가 어떤 구실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알리고 비판하는 건 저널리즘의 몫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널리즘이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살피고 싶었다.

### 무엇을 어떻게 보도해왔는가

용어를 먼저 살펴보자. ‘언어’는 객관적인 단어다. 이보다 더 많이 쓰이는 ‘우리말’이라는 단어는 비객관적이다. ‘우리말’이란 단어 속에는 다른 것을 배척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국어’란 단어도 있다. 이 단어는 ‘우리말’ 언저리 정도에 문어적으로 쓰이는 단어다. 저널리즘은 이들 단어 가운데 ‘우리말’이란 낱말을 자주 쓰곤 했다. ‘우리말’이란 단어는 ‘순수함’, ‘우수함’에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전제한다. 여기에 ‘한글’이라는 ‘최고’ 문자까지 더해지면, ‘우리말’에는 다른 가치들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한글’은 문자를 넘어 ‘우리말’의 의미로 혼동돼 사용되기도 했다. ‘우수하고 순수한 우리말’에는 규범이 더욱 강조됐다. 맞춤법도, 표준어 규정도, 외래어 표기법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는 층도 나타났다. 저널리즘도 이러한 압박에 더욱 힘을 실었다. 일상의 사적인 공간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호통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표준어는 공적인 공간의 언어다). 그 결과 표준어는 맞는 말이 됐고, 표준어가 아닌 말은 틀린 말이 됐다. 비표준어는 단지 표준어가 아닐 뿐이지만, 틀린 말로 인식하는 게 상식이 돼버렸다. 표준어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 근대국가로 가는 논리가 아직 널리 통용된다. 이 길에는 저널리즘도 깊이 참여하고 있다.

‘엄격하다’는 말은 유연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표준어 관리를 국가가 직접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경계를 선명하게 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경계가 뚜렷하다. 국가가 표준어라고 발표하는 순간 표준어가 된다. 전날까지 비표준어였던 말이 한순간 표준어로 바뀐다. 마음 놓고 써도 된다는 증표를 주는 것이다. ‘짜장면’이 표준어라고 국가가 발표하기 직전까지 국민들이 쓴 ‘짜장면’은 비표준어였고, ‘틀린 말’이었던 것이다. 이전까지는 ‘짜장면’이라고 하면 괜히 씹쓸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코미디 같은 일이다. 저널리즘은 이를 놓고 ‘승격’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보도했다. 표준어 발표가 뉴스거리가 됐다. 이에 대한 근본적 비판은 없었다. 현실을 받아들여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편하게 해주었다는 말만 전했다. 표준어를 국가가 계속 정하고 발표하는 게 불편한 것이라는 점은



저널리즘은 어문 규범과 옳고 그름 차원의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룬다. 여러 언어 현상을 분석하고 사회 문제와 연결하는 비판적 기사는 드물다. (출처: 필자 제공)

짚지 않았다. 관심이 없거나 무지했다.

‘짜장면’은 2011년 8월 31일부터 표준어가 됐다. 당시 정부는 ‘짜장면’을 비롯해 ‘간지럽히다, 개발새발, 눈꼬리, 맨날, 맹송맹송, 먹거리, 복숭아뼈, 손주, 연신’ 같은 말들을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대중의 눈에는 황당한 것이기도 했다. 일상에서 표준어처럼 사용하던 말들이었다. 대중의 반응은 ‘이런 말들이 비표준어였다니’였다. 저널리즘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표준어의 목록이었다. 이 목록에 올라간 말들은 이제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다. 언어에 대해, 정확하게는 ‘우리말’에 대해서는 옳으나 그르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저널리즘은 언어의 규범 문제를 언어의 모두인 것처럼 비치게 했다.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는 말이어도 규범을 벗어나면 지적했다. 이것은 ‘우리말은 어렵다’는 푸념을 확대 재생산시켰다. ‘옳고 그름’에만 바탕을 둔 보도는 언어에 대해, 생활에 대해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했다.

모든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한쪽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이것을 부정하면 있는 그대로를 못 보게 되고 왜곡하는 현상을 낳는다. ‘옳고 그름’식 접근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멈칫거리게 한다. 어떤 말이 잘 ‘어울리느냐’보다 ‘맞느냐’를 질문하게 만든다. 생각을 덜하게 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어문 규범과 어휘 풀이 보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적하는 것은, 가치에 비해 지나치면 본질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마지막 주 국립국어원이 모은 언어 관련 기사는 35건이었다. 이 가운데 어문 규범과 뜻풀이 관련 기사가 12건으로 34%나 차지했다. 이외 행사와 일반기사가 15건으로 42%였다. 최근의 남북 관계를 반영한 듯 남북 언어에 관한 기사도 3건 있었다. 말 다듬기 관련 기사가 2건, 어원이 1건,

번역 관련 1건, 언어와 사회 기사가 1건이었다.

어문 규범 외의 기사에서도 비슷한 잣대로 작성되는 것이 적지 않다. 한글날 즈음에는 한글의 우수성과 우리말의 소중함만 강조하는 보도가 많다. 한글날이 아니라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칭찬 일변도의 기사, 화려한 행사 기사들을 보고 났을 때 남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된다. 여기에 같이 등장하는 것이 외국말 사용이다. 그중에서도 일본어 잔재에 대한 지적은 수없이 되풀이된다.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 투와 관련된 보도는 광복절에 으레 따르고, 평상시에도 수시로 지적된다. 민감한 뉴스거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뉴스는 일본식 한자어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대안이 없는 말이어도 괜스레 찝찝하게 만든다. 규범을 위한 규범의 전달과 같다. 이때 소통과 거기에 따른 언어문화 전반의 문제는 가려지고 만다. 언어저널리즘은 이분법적이고, 지나치게 계몽적이며, 다소 선정적이다. 비판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어문 규범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규범 자체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효율적인 언어생활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유의 보도는 언어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곳곳에서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를 강조한다. 아주 오랫동안 이 말들에 대한 오용을 지적했다. 이제는 티브이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가르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 시계는 네 시계와 틀려”라고 ‘틀리다’를 ‘다르다’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올바르게 쓰라고 가르칠 문제가 아니다. 현실을 알리거나 가르치는 걸 멈추라는 기사가 더 유용해 보인다. ‘자랑스런’을 ‘자랑스러운’이 ‘맞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렇다.

“

언어 문제는 언어 내적인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언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뀔 여지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모습과 구실을 살피는 게  
언어학자들의 몫이라면, 언어가 어떤 구실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알리고  
비판하는 건 저널리즘의 몫이다.

”

사이시옷의 사용법은 도처에서 저항하는 표기 방식이다. 그럼에도 사이시옷을 적는 방식을 알리는 보도가 많다. 쉬운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어문규범 강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저널리즘이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어문 규범의 문제는 남북 언어의 문제와 더 밀접하게 이어진다. 남북 언어 이질화를 때로 말하지만, 남북 언어의 이질화를 말하는 건 그리 적절치 않아 보인다. 지역 방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말을 적는 어문 규범에도 차이가 있다. 분단으로 인해 낱말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남북 언어의 문제를 차분하게 짚는 언론의 보도도 아쉽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언어가 어떤 구실을 해야 하는지, 북쪽의 언어문화는 남쪽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호칭 문제가 북쪽에는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우리의 호칭 문제는 양성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호칭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호칭 때문에 상대와 다투기도 한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앓고만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성차별적인 호칭과 관련한 건의가 오르면서 더 관심을 끌고 있지만, 차분하고 지속적인 보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시대에 어울리는 호칭어들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를 언제나 요구한다. 정치가 언어와 긴밀한데도, 언론은 정치언어에 대해서도 덜 보도했다. 정치인들의 막말이 많아지면서 품격 있는 정치언어가 필요하다는 맥락은 자주 보도했지만, 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언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살피지 않았다. 전문용어와 일상의 말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졌어도 저널리즘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 전문 용어는 외국어투성이이고 다가서기 어려운 말들이 많아졌다. 과학 분야 노벨상을 휩쓰는 나라들을 보면 전문용어가 어렵지 않다. 표준화돼 있고 대중과 가깝다. 일상의 말과 가까운 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 미국은 전문용어가 일상의 언어와 겹치는 비율이 60% 정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낮고 쉬운 행정언어는 관청의 높이도 낮춘다. 지금도 아직 옛것들이 널려 있고 유통된다. 행정 언어에 대한 비판 기사들도 부족하다. 교육 문제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얼마나 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국어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말해야 한다. 헛도는 언어의 문제를 현상이 아니라 배경을 짚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어 문제는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길이면서 모든 것과 연결돼 있다. 모든 것의 바탕이다. 차분하고 분석적이며 비판적인 언론의 보도를 바란다. 📌